



MBC 박상후 부장을 용서할 수가 없다



△ 5월 7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실종자 가족들의 조급증이 잠수부를 죽음으로 떠밀었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세월호 유가족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부르고 각종 해프닝을 빚었다는 최악의 보도를 내놨다. MBC는 지난 7일 박상후 전국부장의 <함께 생각 해봅시다>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면서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은 또 쓰촨 대지진 때 중국인들은 애국심이 넘쳐났고 동일본 사태 때 일본인들은 평정심을 유지했다면서 “(세월호)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다”는 것과 비교해 실종자 가족들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실종자 가족들이 더딘 구조를 비판하고 ‘다이빙벨’ 투입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일본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을 인용해 비판했다. 보도는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를 20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에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라는 댓글 내용을 언급했다. 실제 다이빙벨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사용됐으나 박 부장은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댓글 내용을 앞세워 실종자 가족들을 폄하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댓글을 쓴 사용자는 한국을 비하하는 댓글을 꾸준히 달았던 사람으로 드

러났다. 한 마디로 ‘실종자 가족들의 조급증과 몰상식’이라는 주제의 리포트를 쓰기 위해 부정확한 사실들을 이것저것 끼워넣기 해 마무리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MBC 보도가 부끄럽다’ 반성하는 후배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 협박까지

박 부장은 세월호 참사 사건 보도를 진두지휘 했다고 한다. MBC의 보도가 어떠했는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구조’작업과 사고 원인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담합, 비리로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사고 원인을 제대로 따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MBC에서 찾을 수 없었다. MBC의 후배 기자들 121명은 MBC 보도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부장은 도무지 반성을 모르는 듯하다. MBC 노조에 따르면, 박 부장은 KBS에 항의하는 유족들을 향해 ‘그런 X들은 관심을 주면 안돼’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MBC보도가 부끄럽다’고 성명을 발표한 후배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MBC와 박 부장은 답해야 한다. 정녕 평정심 없고 조급한 국민과 유가족들이 잠수부를 강제로 바다에 밀어넣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의 적극적 구조를 요청한 것을 조급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청와대 출입기자도 '기레기'를 자처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이 잇따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반성과 수습의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슬픔과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팔걸이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또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라며 그를 비호하려 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여론의 못매를 맞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은 다른 언론사들에 의해 출입처인 청와대 기자실(춘추관)에서 ‘출입정지’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전제)를 깬다는 이유다. 애초 청와대가 중대한 공적 업무에 대한 정보도 아닌 “라면에 계란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 따위의 발언에 비보도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주고, 지키지 않은 동료 기자들에게 합심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권력의 최정점인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그에 걸맞는 책임으로 권력의 행태를 감시해야 할 기자들이 권력의 요구에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출입정지 징계를 받은 언론사 4곳 가운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지면을 통해 동종업계의 행태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출입처 징계가 내려진 다음날인 5월 9일자 1면 하단에 박래용 정치부장이 쓴 ‘기자 메모’를 실었다. <청와대 대변인의 ‘계란 발언’ 보도했다고 출입정지... 부끄러운 ‘1호 기자들’>이란 제목의 칼럼이다. 일간지 1면에 기자가 쓰는 칼럼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정치부장은 “통상 오프가 깨질 경우 당국자의 발언은 ‘비보도 약속’이 해제되고, 이후부터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청와대 기자 간사단은 이례적으로 ‘비보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치부장은 관련 기사에 대해 “세월호 참사 7년째였던 당시에 나온 민 대변인의 발언은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런데도 기자단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알리기 보다 오히려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니 언론의 책무를 내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며 동종업계의 행태에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비보도 전제가 깨졌는데도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던 대다수 언론들은 이 같은 청와대 기자단의 징계 결정 역시 보도하지 않았다.

박원순은 ‘때리고’... 김황식은 ‘봐주고’



△ 5월 6일자 TV조선 <뉴스쇼 판> 화면 캡처

TV조선과 채널A,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과 발 맞춰 박원순 때리기에 집중

TV조선과 채널A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을 한 꼭지로 묶어서 보도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지하철 사고 등을 언급하는 상황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을 보도할 때에는 최소한 박 시장의 그에 대한 반론의 말 정도는 함께 다루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TV조선과 채널A는 노골적으로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의 주장만을 보도했다.

TV조선 <갈수록 날카로운 신경전> (6일, 신정훈 기자)에서는 소재목을 <“박원순 시장을 때려라”>로 자막처리한 뒤,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로 안전 문제로 너나 할 것 없이 박 시장과 각을 세웠다고 보도하면서 정몽준, 김황식 예비후보의 박 시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담았다. 채널A <‘박원순 때리기’ 뭉치고... ‘박심’ 경쟁> (6일, 노은지 기자)에서는 제목부터 박원순 때리기였다. 내용에서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하면서 앵커가 “너나 할 것 없이 박 시장의 실정을 공격하데 방점이 찍혔다”, “정몽준 의원은 지하철 안전과 공기질 개선을 약속하면서 지하철 2호선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황식 예비후보 불법선거운동은 ‘두루뭉수리 보도’

새누리당 김황식 예비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명확한 불법선거운동 정황이 드러난 불법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부족했고, 보도하는 경우에도 김황식 정몽준의 두 후보의 공방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특히 YTN과 채널A는 김황식 불법선거운동 논란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보도시늉을 하는 데 그쳤다.

KBS, '세월호 물타기' 총대 댔나 ...채동욱 4꼭지-무인기 4꼭지

	KBS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 A
5월7일 채동욱 수사	4 (8~11번째)	1 (13)	2 (10~11)	2 (10~11)	2 (24~25)	3 (5~7)	1 (19)
5월 8일 무인기 보도	4 (1~4번째)	4 (1~4)	2 (8~9)	3 (11~13)	1 (23)	3 (1~3)	2 (17~18)
5월 9일 경제대책 언급	1 (1~2번째)	3 (1~3)	2 (9~10)	2 (3~4)	0	1 (10)	2 (18~19)

△ 방송사별 세월호 물타기 보도분류 및 건수

세월호 대참사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면서 세월호 이슈를 덮어보려는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5월 7일 KBS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4꼭지나 보도했다. 당일 타 방송의 보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KBS는 채동욱 기사와 관련해 내용을 꺾은 바 있어 이같은 보도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5월 8일에는 무인기 관련 보도를 KBS와 MBC가 톱 보도로 배치하며 4꼭지나 방송했다. 5월 9일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위축되어 박 대통령이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보도되었다. KBS와 MBC는 여전히 이 주제를 톱 보도로 배치했다. 이 같은 이슈들이 뉴스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직 팽목항에서 실종자가 족들이 애타게 시신 수습을 기다리고 있고, 사고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추모 열기 등 주요 사안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KBS와 MBC가 유난히 세월호 참사를 제쳐놓고 이러한 주제를 톱 보도로 배치하거나 여러 꼭지로 할애해 보도하는 것 자체가 세월호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적인 물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채동욱 검찰 수사 관련해 채널A <“삶이 너무 허망하다” 내 연녀의 한탄> (7일, 채현식 기자) 보도는 사생활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도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내연녀의 이메일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자는 “당신을 원망하는”, “내 아이 아빠인 게 부끄럽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 “신들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등 구체적인 이메일 내용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단독입수라고 개인만의 영역인 이메일을 그것도 보낸 것인지 아닌지 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일기에 가까운 글을 이처럼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언론의 폭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5월 9일자 11면 <‘채동욱·무인기’ 쏟아낸 정부, ‘세월호 책임론’ 관심 돌리기>에서 최근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조사결과 등의 발표가 물리는 것에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시급한 현안을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화> <조선> <중앙>의 ‘웃픈’ 경제살리기 출구전략 ‘응호’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하기도 미안”
개그프로 결방에 개그맨 생계 걱정

방송 코미디프로 출연진 속앓이를 행한다. 하지만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이후 행사가 딱 끊겼다. 간혹 섭외가 뜸하다. 기획자 바이너리 777

△ 5월 7일자 문화일보 12면 기사

세월호 참사로 대정부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살리기 출구전략’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고 보수 신문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문화일보는 7일자 종합면에서 <개그프로 결방에 개그맨 생계 걱정>이라는 기사를 실었

다. 신문은 “(세월호 참사로) 웃겨야 사는 이들이 웃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썼지만 이런 기사 자체가 요즘말로 ‘웃프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 <이대로 가다간 3년 만의 경기 회복 불씨 꺼진다>에서 “사회 전체가 위축된 현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9일자 사설 <세월호 쇼크, 경기 회복 불씨 꺼뜨려선 안 돼>에서 “정부가 앞장서 과하지 않은 행사와 대회, 여행과 소비는 재개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주재의 ‘긴급 민생 대책회의’를 엄호하더니 10일자에서는 ‘긴급 민생 대책회의’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크게 실었다.

‘국민 분노’를 ‘반정부 선동’으로 보도

세월호 대참사 이후 국민의 염원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 유가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염원이다.

이를 위해 사고 원인과 발생에 대한 책임자 처벌,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무능과 무대책 비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정부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읊던 언론의 개혁이라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의사 표현을 놓고 ‘반정부 선동’으로 몰아세우며 낙인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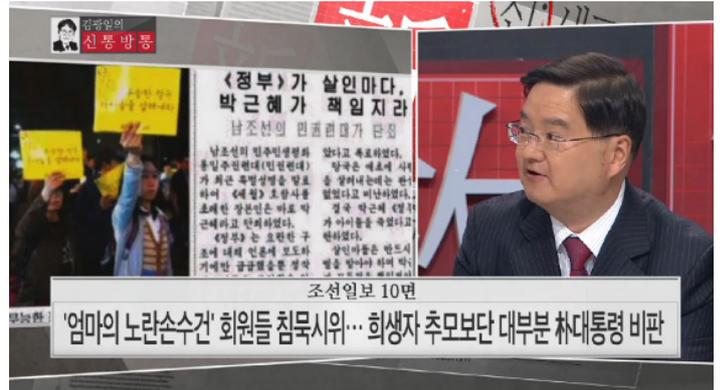
종편 ‘좌파 몰상식 행태’로 매도

TV조선은 <간식상에 ‘대통령 비난글’>(6일)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 대통령 하야 공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대통령 하야 공세로까지 이어 가는 건 좀 지나치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같은 날 채널A 역시 <국민 슬픔에 편승한 ‘반정부 선동’>(6일) 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정략”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세월호 대형 참사가 ‘인재’임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하지만 이들 매체들은 오히려 ‘반정부 선동’ 또는 ‘정치적 이용’ 등으로 묶어내면서 ‘가만히 있으라’만 외치고 있다.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한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 비판도 거뒀다. 채널A <[집중진단]국민 슬픔 틈탄 선동...그 진원지와 순수성은?>(6일)에서는 정치부 박민혁 차장과 대담을 하면서 국어시간이라도 된 듯 기자와 앵커가 김용옥 교수 글을 구구절절 해석하며 설명하고 김용옥 교수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핸드폰이 없었네 어쩌네 하는 코미디 상황을 연출하더니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 앞에 사례를 든 게 아니냐란 지적”이라고 정리했다.

MBC ‘전교조 추모영상’에 정치 딱지

참사 희생자를 과거 독재정권에 희생된 학생들에 비유한 전교조 추모영상을 일부 좌파의 정치선동으로 평가르기한 보도도 있었다. MBC는 7일 <전교조 추모영상 정치선동 논란>에서 “일부에서는 전교조 등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외 TV조선 <‘무능 정부가 타살’ 동영상>(7일), TV조선 18번째 <세월호 참사 정치선동 도구>(7일), 채널A <‘세월호 참사’ 들먹이며 정치 선동>(7일)에서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가했다.



△ 5월 6일자 TV조선 <신통방송> 화면 캡처

종편 시사-정부 무능 비판에 ‘중복’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토크프로그램은 정부 책임론 등을 언급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세력, ‘중복세력’, ‘대중조작’, ‘분노 마케팅’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6일 TV조선 <신통방송> 진행자 김광일 씨는 ‘분노를 팔아서 정치적 흥행을 노리는 분노팔이’라고 비난했다. 7일 배진영 씨는 ‘엄마의 노란손수건’이라는 단체를 언급하며 “대표가 과거 민노당 대의원, 통진당 당원”이라고 언급했고, 북한 노동신문이 관련 보도를 한 것을 두고 “중복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중복세력’이라고 규정했다. 6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한 전원책 씨는 김용옥 교수를 언급하며 “현대 대중 민주주의의 맹점이 대중조작”, “정치혼란을 획책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선 동아 문화 ‘정치 선동’으로 호도

조선, 동아, 문화일보는 세월호 참사에 무능으로 일관했던 現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反정부 투쟁’, ‘정치 선동’으로 몰고 갔다. 이 신문들은 ‘어린 희생·국가 재난’을 불순한 세력들이 ‘선동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도리어 또 다른 선동이라고 할 만 하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유족들 시위에 끼어든 한 외부인사 “여러분처럼 조용한 건 처음, 안타깝다”>에서 “시위꾼들이 유족들 농성장에도 나타나 反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동아도 10일자 사설 <누가 왜 세월호를 정치 선동에 악용하는가>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反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전교조의 세월호 추모영상’을 가지고 7,8,9일에 걸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강도높게 비난했다. 게시된 지 1주일이 넘은 이 시점에 ‘내용’을 문제삼는 문화일보의 의도가 궁금하다.